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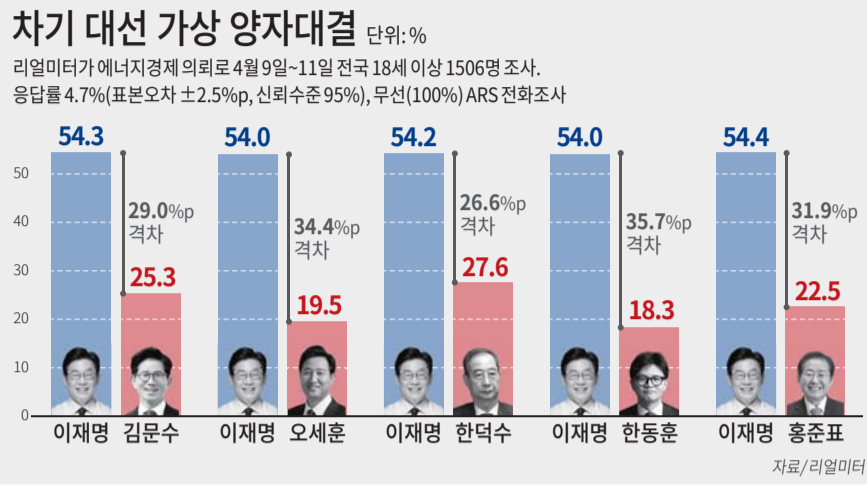
李, 대선 가상 양자대결 ‘압승’… 한덕수, 최저격차 기록

한덕수 ‘26.6%p’로 李 최근접 격차
김문수 29.0%p, 홍준표 31.9%p 차
국민의힘 경선 출마자 ‘韓 견제구’
민주당 “권한대행 업무에 집중하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과의 양자대결에서 모두 앞서서 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그런 가운데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 전 대표와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1일 대선 양자대결 조사를 한 결과,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 5인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주자들과 26~35%포인트 격차를 벌리며 우세를 점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최근접 격차를 기록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54.2%, 한 권한대행은 27.6%를 기록해 26.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물론 이 전 대표가 두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지만, 한 권



한대행은 다른 국민의힘 주자들에 비해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25.3%)이 이재명 전 대표(54.3%)와 한 권한대행 다음으로 적은 차이(29.0%포인트)가 났다. 김 전 장관은 보수 진영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근소한 차이로 한 권한대행에게 밀린 셈이다.

그다음으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22.5%), 이 전 대표는 54.4%를 기록해 31.9%포인트 차이를,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19.5%)은 이 전 대표(54.0%)와 34.4%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8.3%)가 이 전 대표(54.0%)와 양자대결로 붙은 5인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격차(35.7%포인트)를 기록했다.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한 권한대행은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 이재명 전 대표(48.8%)가 가장 높았고, 김문수 전 장관(10.9%), 한덕수 권한대행(8.6%), 한동훈 전 대표(6.2%), 홍준표 전 시장(5.2%)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새로 포함된 한덕수 권한대행이 김문수 전 장관을 바짝 쫓고, 한동훈 전

대표를 앞선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93.7%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 경쟁력 조사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32.7%로 1위, 한덕수 권한대행이 19.2%로 2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6.1%, 홍준표 전 시장은 13.7%였다.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심지어 무소속 출마 뒤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경선 출마자들은 견제구를 던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권한대행 차출론과 관련해 “우리는 후보로 나오라고 흔들고 야당은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흔들고 그러니 나라가 잘되겠다. 굉장히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경선의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라며 “이건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상식에 반하는 정치 행태이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분을 출마시킨다

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출마 말고 권한대행 업무에 집중하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의미한 극우 경선에서 승리할 후보 대신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세워 단일화 쇼를 벌이며 당권을 유지하려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기영 최고위원도 “내란 세력에 게 유행처럼 번진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라며 착각에 빠지는 병이라는 의미’에 걸려 윤석열 아바타를 꿈꾸는 한덕수 대행은 대선에 가웃거릴 게 아니라 공정한 대선 관리에 집중하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2383명에게 전화를 시도해 최종 1506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응답률은 4.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조사 방식은 무선 100% 자동응답(ARS)으로,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RDD)를 활용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한덕수, 대정부질문 일방적 불출석… “지금까지 없었던 일”

우원식 “교섭단체 양해·의장 허가 없어 예정된 일정… 불출석 가당치 않아 무책임한 태도 반복되어선 안 될 것”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선거 차출론이 불거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해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을 대정부질문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일부로부터 대선 출마 요구를 받고 출마 여부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불출석에 대해 “오늘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불출석했다”며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라며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을 핑계 댈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메꾸는 것이 아니다. 국회와 소통하

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대정부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고,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라며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니다.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정부질문은 모레까지 진행된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이 한 권한대행을 ‘유력 대선 후보’로 언급한 통화가 보도로 나온 경위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의 거래 주의적 세계관으로 볼 때 서로 무언가를 거래하고 나서 유력 대선 후보라는 말을 들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고발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 넘게 지연시켰던 장본인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불과 나흘만에 내란수괴가 임명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민주당 경선룰 ‘당심 50%·여조 50%’ 확정

김두관 ‘반발’… 김동연 ‘수용’
‘외부유입 세력’ 우려에 변경

더불어민주당이 14일 6·3 대선후보 경선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확정했다. 기존 ‘국민 경선(국민선거인단)’ 방식은 사라진 셈이다. 이같은 결정에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강력 반발하며 경선 거부를 선언했다. 반면 경선 참여를 고심하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

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

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특별당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후 당무위원회와 전 당원 투표를 거친 후 이날 중앙위원회 의결로 경선 료를 최종 확정했다.

이같은 내용의 특별당규는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전 당원 온라인 투표에 부쳐졌다. 권리당원 114만749명 중 38만9033명(34.1%)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96.56%인 37만5978명이 찬성했

다. 반대는 3.44%로 나타났다. 중앙위원회는 590명 중 51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492명이 찬성했다.

이번 경선 규칙은 지난 19·20대 대통령 선거 방식과는 다르다. 당시에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일반국민을 모두 선거인단으로 포함해 투표를 진행하는 국민 경선(국민선거인단) 방식으로 본경선을 진행했다.

10년 이상 유지해온 경선 방식을 바꾼 이유는 20대 대선 경선 마지막 투표 때문이다. 앞선 경선에선 압도적으로 이기던 이재명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크게 밀린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외부 유입 세력이 ‘역선택’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40시간 근무·주4.5일제 추진”

주5일 중 4일 1시간씩 더 일하고
남은 하루, 4시간 근무 후 퇴근

국민의힘이 주5일 중 4일을 1시간씩 더 일하고 남은 하루는 4시간 덜 일하는 식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으로 제안된 국민 여러분의 정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주4.5일제 근무제를 소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울산 중구청은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에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주4.5일제를 시범 실시 중”이라며 “직원들은 월~목 하루 8시간 근무시간 외에 한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민에게 기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이 순환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아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 이는 기존 주5일제를 유지하면서도 주4.5일제의 실질적 위라벨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